

# 검찰개혁 둘러싼 秋-尹 갈등 1년 내내 지속

## ■ 개요

2020년 내내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추 장관이 교체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두 사람은 사사건건 대립하다가 급기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극한 사태를 불러왔다.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검찰 역사상 이례적인 조치를 연달아 지시했고, 윤 총장은 이런 조치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반발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 ■ 추미애-윤석열, 검찰 인사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추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부터 부딪혔다.

추 장관은 1월 8일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며 윤 총장을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법무부로 호출했다.

그러자 윤 총장 측은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가 인사 명단을 주지도 않고 의견을 내라는 건 '총장 의견을 청취했다'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되 윤 총장 의견을 실제 인사에 반영할 의사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검찰에선 '윤석열 패싱' 인사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당일 저녁 전격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윤 총장을 보좌한 대검 참모진 등은 대부분 좌천성 지방 발령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들 대부분이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에서 징계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진정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도 충돌했다.

대검이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담당하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먼저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대검이 "감찰 사안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윤 총장과 가까운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한층 증폭됐다.

윤 총장은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 등 판단을 맡

겨달라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6월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우회 비판했다. 윤 총장이 수사를 무마할 명분을 찾으려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추 장관은 수사 대상에 오른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격 발령내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멈추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지시도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사장 회의 결과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검검사를 도입해 사건을 수사하게 하자는 결론을 냈다.

고심 끝에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 건의를 즉각 거부했다.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두 사람의 알력은 결국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전면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을 이동재 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으로 해석하며 이 전 기자를 계속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며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길 때 작성한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부분이 없었다.

윤 총장과 윤 총장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던 9월,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연장 특혜 의혹 수사로 사퇴 압박까지 받으며 한 달 내내 곤욕을 치렀다.

9월 말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며 추 장관과 아들 등 핵심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추 장관이 앉힌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정권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석 연휴 전에 무혐의 처리 발표를 서둘렀다는 비판이 나왔다.

## ■ 라임 사태 이후 갈등 절정…국정감사장서 난타전

두 사람의 갈등은 10월 들어 극으로 치달았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 접대 의혹과 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윤 총장이 이를 보고받고도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10월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과 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세 번째, 자신의 임기 중 두 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일단 이를 수용한 윤 총장은 사흘 뒤 열린 대검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증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당일 "퇴임 후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당시 국정감사 이후 윤 총장은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에 올라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추 장관과 여권이 윤 총장을 몰아붙였다가 도리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감을 키워준 셈이 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공개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윤 총장은 10월 말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여권은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수사"라며 윤 총장에 대한 총공세를 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니처럼 사용한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 검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별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은 윤 총장을 감찰 조사하는 사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였다.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과 보고 누락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대검 특별비 배분 건 등이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남 의혹을 확인하겠다고며 검찰관 소속 평검사 두 명을 대검에 보내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하려다 대검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결론은 추미에 패

두 사람의 강 대 강 대치는 추 장관이 11월 2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개 혐의를 직무배제 사유로 들었다.

윤 총장은 주어진 임기를 채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면서 곧바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추 장관에 맞섰다. 검찰에서는 전국적으로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나서 추 장관에게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철학을 요구했다.

추 장관은 이에 지지 않고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그러나 12월 1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검찰위원회는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날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고집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에 출근했다. 직무 정지 일주일 만이었다.


추 장관은 검찰위와 법원의 판단에 한발 물러서며 12월 2일 열려던 징계위를 연기했다. 그러나 징계위 개최 자체를 취소하진 않았다.

징계위는 10일과 15일 두 차례 열렸다. 징계위는 2차 회의에서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16일 새벽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재판부 사찰 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주요 일지**

<b>11월</b>	24일 추미에 법무부 장관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발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26일 윤 총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 제기	30일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후 판단 유보
		<b>1일</b>	<b>12월</b>	
	윤 총장,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일에서 4일로 연기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윤 총장 업무 복귀 및 대검 출근	법무부 검찰위원회, 윤 총장 징계청구 직무배제 부적정 권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b>2일</b>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b>3일</b> 윤 총장, 징계위 기일 변경 재요구 재연기	<b>4일</b> 윤 총장, '법무부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 검사징계법 조항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b>16일</b> 징계위, 윤 총장에 정치 2개월 의결	<b>15일</b>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 시작 (윤 총장 불출석)	<b>10일</b> 법무부 검사징계위 개최, 약 9시간 30분 심의 진행 후 종료 (윤 총장 불출석)	추 장관,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불복해 즉시 항고
	<b>17일</b> 문재인 대통령, 추 장관 제정한 윤 총장 징계안 재가	<b>22일</b> 윤 총장, 징계 처분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b>24일</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 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차 심문 종료	<b>24일</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 총장 징계 효력 정지 결정, 윤 총장, 직무 복귀



연말뉴스

혹과 채널A 사건 검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를 인정하고 징계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추 장관은 징계위 결론이 나온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정하면서 자신도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고,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서도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그러나 다음 날인 17일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추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도 “징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특히 윤 총장이 징계위에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다시 총장직에 복귀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간의 싸움에서 추 장관이 완패한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은 해를 넘기기 전 추 장관의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추 장관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인 2021년 1월 27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2020년 1월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강조한 추 장관은 이임식에서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없다”는 말을 남겼다.

추 장관 후임인 박범계 장관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런 인연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전임 장관 시절보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박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조짐이 드러나 ‘추미에 시즌 2’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 박원순 극단선택·오거돈 사퇴… 정치권 미투 파문

### ■ 양성평등 외친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극단적 선택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자락에 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거기서 보였을 한양도성 담벼락과 울창한 삼림은 그가 재임 중 공들여 가꾼 것들이었다. 그는 역사와 환경뿐만 아니라 여성인권 옹호에도 힘을 쏟았다. 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박원순은 한국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인정 판결을 끌어낸 인물이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이 천착한 과업들과 그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그날 산등성이에서 박 전 시장이 내린 선

택과 함께 모두 뒤흔들렸다.

박 전 시장에게는 재임 기간 내내 ‘유력 대권주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2011년 첫 당선 이후 서울시정과 한국정치 지형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오랜 시민단체 경력을 바탕으로 공무원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었고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면모를 선보이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야당 출신 서울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 날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과시, 자연스레 대선주자로 거론됐다.

2020년 중반까지도 다르지 않았다. 지지율은 예년보다 떨어졌지만, 당장의 지지도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면 코로나19, 미세먼지, 탄소중립, 성평등 등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정책 만들기엔 힘을 쏟았다.

7월 8일 박 전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 서서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2035년부터는 휘발유·경유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여느 정부 기관처럼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발표자를 과장·실·국·본부장·부시장, 시장 등으로 구분한다. 이날 박 전 시장의 직접 발표는 이 사안을 그가 앞장서서 챙겼고 많은 관심을 뒀음을 의미했다. 박 전 시장은 “서울판 그린뉴딜을 추진해 탈 탄소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때까지 그의 앞날을 궁금해 한 이가 있었다면 아마도 차기 대선 출마나 당선 여부 정도가 주된 관심사였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박 전 시장의 행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끝을 향해 치달았다.

전날까지 현업에 여념이 없던 박 전 시장은 7월 9일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시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그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다소 피로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시장 정도쯤 되는 인물은 사실상 24시간 근무나 다름없고 어디서든 보고를 받을 수 있으니 물리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상황 자체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이날 오후 박 전 시장 딸이 경찰에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박 전 시장은 오전 10시 44분께 가회동 관사를 나섰고 오전 10시 53분께 와룡공원 인근 폐쇄회로(CC) TV에 포착된 뒤 자취를 감췄다. 그의 휴대전화 신호는 오후 4시께 성북구 북악산에서 끊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수색은 산자락에 어둠이 깔리면서 길어졌다. 수색이 진행되는 사이 그를 둘러싼 당시만 해도 생경한 의혹이 부상했다. ‘박원순의 비서가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박원순 이름 석 자가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성희롱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끌어낸 한국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이었다. 1993년 소송 제기 후 6년여에 걸쳐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피해자 승소로 끝을 맺었는데 박원순은 공동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소송을 이끌었다. 조영래 변호사 등과 부천경찰서 권인숙 씨 성고문 사건 변호에도 참여하는 등 굵직한 성범죄 관련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시장이 된 뒤에는 젠더특보를 설치하고 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도 감히 페미니스트라 자처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성추행 혐의 피소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이제 그는